

尹 “많이 소통하고 민심 경청”… 野 “독선 선언”

국무회의서 4·10총선 입장 밝혀

협치 등 구체적 내용은 없어
민주 “반성 대신 변명 늘어났다”
조국당 “자화자찬으로 일관”
국힘 “민생 제1원칙 변함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옛새만이다.

하지만 야당과의 구체적인 협치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제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기초 자체는 맞는 방향이라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구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입장을 두고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반성은 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총선 민의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자랑 말고 반성을 하라”고 일침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놀랍다. 자화자찬으로 일관한다”면서 “부자들을 위해 뭉터기로 세금을 깎아줘 세수 부족 사태를 일으킨 정부가 어느 정부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한마디로 국정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다. 이대로 쪽 가겠다는 오기”라며 “기대할 게 없으니, 국회가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희용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정의 우선순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민생’이라는 제1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내부 이재명 당 대표 ‘연임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 원내대표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 내에서 벌써부터 이재명 당 대표의 ‘연임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진명(진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16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역투쟁을 확실하게 하는 의미에서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헌에 의하면 연임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당헌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대선 1개월 전에 당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대표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런 비슷한 말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한다”면서 “그당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 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박지원 당선인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하고 그 리더십에 이번 총선의 승리를 가져다 줬다”며 “그렇다면, 이 대표가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선 압승을 이끈 이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진명계를 중심으로 연임론 군불 때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만약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한다면 당권을 쥐고 대권으로 직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민의힘 ‘실무형’ 비대위 구성키로

국민의힘은 16일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회를 구성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당선자 총회를 열고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구성이 필수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이 아니다”며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당선자 총회에서 어떤 인물

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전까지 비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당내 의견과 관련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2시 상임고문 회의를 열고 차기 지도부 구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오는 19일에는 22대 총선 낙선자들과 모여 당의 변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혁신당 “골프·코인·비즈니스석 금지” 5가지 다짐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16일 22대 국회에서 회기 중 골프를 금지하고 코인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부터 진행된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조국 대표가 발제한 ‘조국혁신당 의원의 5가지 다짐’을 결의했다.

5가지 다짐은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음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협의 △보좌진에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 요

구 금지 등이다.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은 조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하셨다”며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 등이 16일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여 “안전, 정치화 안돼”… 야 “국가 책임 다했나”

정치권 ‘세월호 10주기’ 애도

여야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한목소리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재난 예방·대응 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다만 여당은 안전이 정치화 대선 안된다며 야당을 견제했고, 야당은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꽃다운 나이에 스러져간 어린 생명들을 비롯한 사고 희생자 304명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슬픔의 무게를 지니고 있을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 재검토 및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착,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

전’ 만큼은 정치화해서도, 논쟁거리가 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기 다른 사회적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유가족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안고 버티는 동안 국가는 과연 무얼 했느냐”고 반문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가족 앞에서 국가는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보다”며 “지난 10년 대한민국은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참사의 진실을 온전히 밝혀냈는지 되돌아보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생명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로 나아가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 그 시작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5월 국회 처리”라고 강조했다.

제31대 정당들도 한목소리로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97년생이었고, 이제 스물여덟이 된 그 나이의 젊은 세대가 지난 10년간 겪었을 트라우마는 사고 그 자체 보다도 안타까운 참사 앞에서 돌로 깔라진 대한민국 정치권 때문이었다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형 참사의 비극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면서 “안전 사회 건설 ‘다시는 세월호의 비극이 없게 하자’는 구호와 정치권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또다시 대형 참사가 일어났고 그 책임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철 도의원 ‘남도 의병 선양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민주당·완도1·사진)이 16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남도의병 선양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 발굴 △남도의병의 날 지



정 △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도의병 선양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기초연구 수행 뿐 아니라 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츠 발굴과 전남도만의 차별화된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남도의병의 희생정신과 숭고한 업적을 기려 지역 사회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곽지혜 기자